

최근 고령빈곤의 실태와 대응방향

조 용 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3차~제8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고령빈곤 실태를 살펴보고, 고령빈곤 가구의 통계적 특성과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의 핵심에 고령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빈곤 여부와 가구주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로짓(logit) 추정결과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이며 연령이 많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자일 경우 빈곤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상대빈곤 진출입에 관한 동태적 이행과정을 살펴 본 결과, 고령자 가구는 평균 빈곤에 빠진 빈도가 3.57회로 일반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자 가구는 일반가구와는 달리 한번 빈곤에 빠지면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도 매우 낮은 ‘빈곤의 고착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이 빈곤진출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며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탈출 확률이 높아지며,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탈출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빈곤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성, 독신자, 저학력자, 미취업자, 지방거주자 등의 고령빈곤 관련 취약집단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부문의 취업능력 개발 투자 확대 및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특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확대와 복지전달 체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는 2000년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과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는 고령화 대국으로 알려진 일본, 유럽 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제반 경제사회적 비용이 당장은 가시화되고 않고 있지만, 고령화 트렌드의 가속적인 진전은 장차 생산인구의 감소, 연금 및 의료비 등 사회보장지출 부담의 증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시스템 및 복지체계 전반에 매우 중대한 과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진행된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연화 흐름으로 인한 노동의 비정규화 및 성과주의 확산은 근로자대중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카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신용불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량자의 양산,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른 자영업 붕괴, 그리고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은 2000년대 이후의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가 정부, 학계 등의 정책적 탐구와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 중의 난제로 뿌리내릴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인구의 고령화(저출산 현상을 포함한) 문제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의 결혼, 출산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와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사회전반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대중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대응으로는 쉽사리 해결의 가닥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역시 금세기 초엽부터 더욱 격화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개방과 경쟁의 조류에 따른 파장이 내수시장과 국내 고용시장에 밀어닥치면서 고용상의 지위나 소득창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당수 근로자 및 자영업 계층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민간소비와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의 사후적 분배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회구성원간 합의 도출 등이 선행되지 않고는 당연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령자 가구의 빈곤 문제는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 사회의 두 가지 핵심현안인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가 중층적으로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한다. 고령자의 경우 청장년 세대에 비해 빈곤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선진외국에 비해 민간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고령자 취업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의 생계안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저축이나 공적 연금 등이 태부족인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빈곤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상화된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년단축, 조기명예 퇴직 등이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 각 개인이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진 만큼, 은퇴이후 생애 최종시점(사망)까지의 잔존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유동성의 확보가 현재의 또는 예비 고령자세대에게는 매우 중대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물론 50대 중후반 장년세대의 경우 세대적 특성상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주택마련 등의 이유로 인해 생애 최고소득기간 동안 연금가입이나 저축 확보 등 개인노후생활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상당수가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생애 최종시점까지 최장 30여년의 기간을 소득이 없거나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고령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빈곤 문제는 개인차원에서는 물론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고령빈곤 문제의 실태에 대한 연구나 정부의 효과적 정책대응 과제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빈곤의 실태를 구명하고 향후의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II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 문제 및 고령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간략히 검토하고, 본 연구에 사용

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2000~2006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령빈곤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특성 및 가구주 개인특성이 고령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고령자가구의 빈곤 진입 및 탈출과 관련된 동태적 이행 양태를 살펴보고 빈곤 진출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고령빈곤과 관련된 향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II. 기존의 선행연구 및 데이터 설명

1. 선행연구 서베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빈곤확산 등에 따라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빈곤의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둘러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제1차 한국노동패널 조사 이래 최근까지 8개 연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문제와 빈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재호·김승택(2001)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진입과 이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구인회(2001)는 한국노동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문제를 다루었다. 이외에도 김철희(2003)는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김성환·전용석·최바울(2004)은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과 가구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김태일(2004)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의 정태적 결정요인과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한 금재호(2004)는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라는 점을 밝히고 빈곤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빈곤층 문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이외에도 홍경준(2005), 김교성·최영(2006) 등이 있다. 한편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5)는 인구의 고령화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은퇴와 노후의 최소소득 및 적정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 장지연(2003)은 고연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고령자의 경제상태와 관련한 연구로는 성지미·이윤정(2001)이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었으며 안중범·전승훈(2005)은 우리나라 대다수 가구의 자산축적수준이 은퇴이후 필요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밝힌 바 있으며, 안중범·전승훈(2006)은 노후대비를 위한 가계의 사적저축 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 가구소득 정책, 주택 정책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2. 데이터의 설명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가구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가구 및 개인패널 자료로 지난 1998년 최초 조사 수행당시 지역, 연령, 성별 등의 비율에 따라 전체 표본가구를 설계하여 매년 이들 표본가구와 해당 가구구성원들의 소득, 고용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0년 제3차 조사 이후 2005년 제8차 조사에 이르는 6개 연차의 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매 조사에서 가구의 총소득이 파악되고, 가구주의 학력, 연령, 성별, 등 개인특성이 파악된 경우를 유효 표본가구로 설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고령자 가구로, 그 이하인 경우는 일반가구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령자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노인복지관련수당의 지급 기준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최근의 조기은퇴 추세나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퇴직연령 등을 반영하여 고령자 가구의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빈곤율이나 빈곤여부와 가구주 특성간의 상관관계 등 이하에서 살펴 볼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제8차 조사의 경우 전체 유효 표본가구의 수는 4,696가구이며 이 가운데 18.9%인 888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로, 나머지 81.1%인 3,808가구는 일반가구로 구분되었다. 다음의 <표1>은 2005년의 제8차 조사결과에서 추출한 유효 표본가구를 65세 미만의 일반가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로 나누어 해당 가구 및 가구주 개인특성을 추출 정리한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일반가구에 비해 약 27세가량 높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을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전문대 이상 고학력 가구 비율이 36%에 달하는 반면 고령자 가구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했다. 가구의 구성원 수 역시 고령자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적은 2.3명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일반 가구에 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의 취업상태를 보면 고령자 가구는 가구주 취업 비율이 28%에 그쳐 일반 가구의 83.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비율이나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연간 소득을 보면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이 고령자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 가구의 주요 특성: 제8차 노동패널조사(2005년)

	총 유효 표본(4,696가구)	
	일반가구(3,808가구, %)	고령자 가구(888가구, %)
가구주 성별		
남 성	3,241 (85.1)	558 (62.8)
여 성	567 (14.9)	330 (37.2)
가구주 평균연령 (만, 세)	44.8	71.9
가구주 학력		
고졸 이하	2,432 (63.9)	800 (90.1)
전문대 이상	1,376 (36.1)	88 (9.9)
평균 가구원수(명)	3.3	2.3
거주 지역		
서울/수도권	1,981 (52.0)	375 (42.2)
비수도권	1,872 (48.0)	513 (57.8)
가구주 취업상태		
취업	3,180 (83.5)	249 (28.0)
미취업	628 (16.5)	639 (72.0)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308 (8.1)	3 (0.3)
기혼(유배우)	2,977 (78.2)	490 (55.2)
이혼 별거	276 (7.2)	29 (3.3)
사별	247 (6.5)	366 (41.2)
가구주 건강상태		
보통이상	3,305 (86.8)	428 (48.2)
건강하지않음.	503 (13.2)	460 (51.8)
가구의 평균 연간 총소득(만원)	3,304.1	1,560.1

주: 제8차 조사에 응답한 전체 가구 중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가구주의 개인특성이 파악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취업상태의 경우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가운데 주 18시간 이상의 경우 취업으로, 기타 미취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중 주 18시간 미만의 경우 미취업으로 분류하였음. 건강상태의 경우 보통 이상은 아주 건강, 건강, 그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하며, 건강하지 않음은 건강하지 않다, 아주 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임. 연간 소득의 경우 각 표본 가구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 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안은 일반가구 및 고령자가구의 표본대비 비중임.

III. 고령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1. 빈곤의 정의

여기에서는 2000년(제3차 조사) 이후 최근 2005년(제8차 조사)까지의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빈곤관련 실태와 추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추세에 따라 빈곤문제는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구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직, 질병, 가계 파산 등으로 빈곤층으로 진입한 경우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실태 파악을 위해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현황을 살펴보기로 하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선 절대적 빈곤(이하 절대빈곤)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물가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책정,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월간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가구를 절대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참고로 2005년 제8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대상기간인 2004년의 경우 보건복지부 발표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36.8만원, 2인가구는 60.98만원, 3인가구의 경우 83.88만원, 4인가구 105.5만원 등이다.

한편 상대적 빈곤(이하 상대빈곤)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OECD(2001), 금재호(2004) 등의 정의를 따라 가구균등화지수를 가중치로 하여 조정된 가구소득(I_k)을 기준으로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에 못미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다. 가구균등화 지수는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동일한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소득증가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가구원수를 n 이라고 할 때, $\sqrt[n]{}$ 의 식으로 나타내어지며, 균등화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의 식은 $I_k/\sqrt[n]{}$ 이다(금재호(2004)).

2. 고령자 가구의 빈곤 실태

이상과 같은 빈곤의 정의에 따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차에 걸친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우선 <표 2>에 나타난 절대빈곤 실태를 보면 전체 유효 표본 가구 가운데 절대빈곤 가구 비율은 지난 2000년 조사 당시 24.6%에서 2005년 조사에서는 15.8%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표본가구 가운데 절대빈곤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안(99.8)과 시행(2000.10) 및 관련 복지인프라 확충 등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양극화 및 빈곤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빈곤층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절대빈곤 여부의 결정은 정부가 매년 책정하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의 적정 수준 여부에도 크게 좌우되는 만큼 최저생계비가 현실 기초생계비나 일반 생활물가 등과 큰 괴리를 보일 경우 절대빈곤 규모는 실제 빈곤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연간 인상률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3~3.5% 수준에 그쳤으며, 2005년의 경우 8.9%, 그리고 2006년 4.15%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분석대상 가구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와 65세 미만 일반가구로 나눌 경우 고령자 가구의 빈곤율(고령자가구 중 빈곤가구 수/전체 고령자가구 수)이 일반가구의 빈곤율(일반가구 중 빈곤가구 수/전체 일반가구 수)에 비해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2005년 조사의 경우 고령자가구의 빈곤율은 38.3%인데 반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10.6%에 그쳐 고령자가구의 빈곤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3.6배 높았다. 전체 표본가구의 절대빈곤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65세 미만 일반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절대빈곤도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반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000년 조사당시 19.1%에서 2002년 11.7%, 그리고 2005년 조사에서는 10.6%로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000년 조사 시 56.8%에서 2002년 50.4%로 낮아졌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38.2%로 낮아지는데 그쳐 일반가구의 빈곤율 감소추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절대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점유율)을 보면 고령자 가구의 빈곤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 조사 당시의 경우 전체 절대빈곤가구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2%에 불과했으나 2002년 이후 45.7%로 급등하였으며 2003~2005년 조사에서도 43~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절대빈곤 가구에서 일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조사 당시 66.8%에서 2005년 조사에서는 54.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은 2000년 조사이후 최근 6개년 동안의 상대빈곤 실태를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2000~2005년의 6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가구 총소득의 중간 값, 즉 중간소득(median income)과 중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poverty line)을 구해 본 결과 2000년 3차 조사 당시 각각 연간 900만원과 450만원이었던 중간소득과 빈곤선은 가계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2005년 제8차 조사에는 각각 1,344.3만원과 672.2만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중은 2000년 조사 당시 20.7%였으며, 2001년과 2002년 조사 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지속하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 21.4%, 그리고 2004년 조사에서는 22.6%로 까지 높아졌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20.9%로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가구 소득의 증가와 정부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이 2000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개선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일반가구와 고령자가구의 상대빈곤율을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2000년 조사 당시 15.4%를 기록한 이후 2004년 조사에서 최고 16.5%로 높아지기도 했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다시 14.2%로 낮아졌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역시 2000년 조사 당시 52.2%를 기록한 이래 2002년 조사에서 최고 55.2%

수준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5년 조사에서는 49.8% 수준으로 낮아졌다. 절대빈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령자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3~4배가량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체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일반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가구의 비중이 2000년 조사 당시 63.8%에서 2005년 조사 결과 55.1%로 낮아진 반면 고령자 가구가 전체 빈곤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2%에서 44.9%로 높아진 것이다. 이상의 최근 빈곤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고령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또는 신빈곤층 문제의 핵심에 고령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2> 2000년 이후 절대빈곤 가구 수와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연도 (유효 표본 가구수)	전체 표본가구	일반가구(65세 미만)	고령자가구(65세 이상)
2000년 (4,202가구)	1,032 [100.0] (24.6)	689 [66.8] (19.1)	604 [33.2] (56.8)
2001년 (4,187가구)	1,030 [100.0] (24.6)	673 [65.3] (19.0)	638 [34.7] (56.0)
2002년 (4,214가구)	762 [100.0] (18.1)	414 [54.3] (11.7)	348 [45.7] (50.4)
2003년 (4,529가구)	852 [100.0] (18.8)	481 [56.5] (12.8)	371 [43.5] (48.9)
2004년 (4,635가구)	875 [100.0] (18.9)	493 [56.3] (12.9)	382 [43.7] (46.2)
2005년 (4,696가구)	744 [100.0] (15.8)	405 [54.4] (10.6)	339 [45.6] (38.2)

주: []의 수치는 전체 절대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또는 점유율)이며, ()의 수치는 전체 일반가구 및 고령자 가구 가운데 절대빈곤 상태인 가구의 비중, 즉 절대빈곤율을 의미함. 각 연차의 조사당시 해당가구의 총소득이 파악되고,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파악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조사 자체의 표본수와 차이가 있음.

<표 3> 2000년 이후 상대빈곤 가구 수와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만원

연도 (유효 표본 가구수)	전체 표본가구	일반 가구 (65세 미만)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중간소득 (빈곤선)
2000년 (4,202가구)	869 [100.0] (20.7)	554 [63.8] (15.4)	315 [36.2] (52.2)	900 (450.0)
2001년 (4,187가구)	903 [100.0] (21.6)	579 [64.1] (16.3)	324 [35.9] (50.8)	915 (457.5)
2002년 (4,214가구)	867 [100.0] (20.6)	486 [56.1] (13.8)	381 [43.9] (55.2)	1,154.7 (577.4)
2003년 (4,529가구)	971 [100.0] (21.4)	566[58.3] (15.0)	405 [41.7] (53.4)	1,200 (600.0)
2004년 (4,635가구)	1,048 [100.0] (22.6)	627 [59.8] (16.5)	421 [40.2] (50.9)	1,281.3 (640.7)
2005년 (4,696가구)	984 [100.0] (20.9)	542 [55.1] (14.2)	442 [44.9] (49.8)	1,344.3 (672.2)

주: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 보다 적을 경우 상대빈곤 가구로 규정함. 상대빈곤의 보다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는 금재호 (2004), OECD(2004) 등을 참조할 것. <표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 수치는 전체 상대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또는 점유율)이며, ()의 수치는 전체 일반가구 및 고령자 가구 가운데 상대빈곤 상태인 가구의 비중, 즉 상대빈곤율을 의미함.

3. 고령빈곤 가구의 통계적 특성

여기에서는 상대빈곤 여부를 기준으로 빈곤으로 분류된 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의 통계적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표 4>는 2000년과 2005년 조사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고령 빈곤가구의 주요 특성을 비빈곤 가구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에서 빈곤가구와 비빈곤 가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고령 빈곤 가구 가운데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인 가구의 비율은 48.2%로 비빈곤 가구의 78.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여성 가구주 비율은 빈곤가구에서는 51.8%, 그리고 비빈곤 가구에서는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빈곤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은 것은 빈곤 가구의 경우 비빈곤 가구에 비해 배우자의 사별, 별거/이혼 등의 비율이 크게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여성 고령자가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령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가구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가구주 성별의 차이는 다른 여타 가구주 특성과 더불어 고령자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0년과 2005년 조사의 경우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비빈곤 가구에 비해 2.2~2.4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 학력 면에서도 비빈곤 가구주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 학력보유 비중이 빈곤가구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은 고령자 가구의 소득창출과 빈곤 여부 문제에 있어서도 연령과 학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균 가구원수의 경우 빈곤가구가 2인 이하인 반면(2000년 2인, 2005년 1.8인), 비빈곤가구의 경우 2.8인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빈곤가구의 경우 독신가구나 배우자와 2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비빈곤가구의 경우 고령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 외에 미분가 자녀 등 여타 가구구성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가구원 가운데 소득창출이 가능한 취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2005년 조사의 경우 빈곤가구의 65.7%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5년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자 가구의 취업상태를 보면,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취업률은 21.4%인 데 반해, 비빈곤가구의 경우 취업률이 35.3%로 빈곤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가구주 혼인상태의 경우 2005년 조사 당시 빈곤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기혼자의 비율이 41.9%에 그친 반면, 비빈곤 가구의 경우 동 비율이 69.6%로 크게 높았으며, 반대로 배우자가 사별하고 독신상태로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빈곤가구에서는 52.9%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 가구에서는 28.5%로 빈곤가구의 약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5년 조사에 나타난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보면 2005년 조사 당시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비율이 빈곤가구에서는 36.7%에 그친 반면, 비빈곤 가구에서는 60.7%가 보통이상의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빈곤과의 상호 인과관계를 이 통계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고령빈곤의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단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통계적으로 고령빈곤 가구 가운데에는 여성 가구주와 고연령자, 저학력자, 비수도권 거주자, 미취업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그리고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높으며 비빈곤가구의 경우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고령 빈곤 가구의 통계적 특성(2000년 및 2005년 조사)

	고령자 가구(2000년 조사)		고령자 가구(2005년 조사)	
	빈곤(337가구)	비빈곤(267가구)	빈곤(463가구)	비빈곤(425가구)
가구주 성별				
남 성	199 (59.1)	204 (76.4)	223 (48.2)	335 (78.8)
여 성	138 (40.9)	63 (23.6)	240 (51.8)	90 (21.2)
가구주 평균연령 (만, 세)	72.4	70.2	73.1	70.7
가구주 학력				
고졸이하	329 (97.6)	223 (83.5)	445 (96.1)	355 (83.5)
전문대 이상	8 (2.4)	44 (16.5)	18 (3.9)	70 (16.5)
평균 가구원수 (인)	2.0	2.8	1.8	2.8
거주지역				
서울/수도권	112 (33.2)	123 (46.1)	159 (34.3)	216 (50.8)
비수도권	225 (66.8)	144 (53.9)	304 (65.7)	209 (49.2)
가구주 취업상태				
취업	72 (21.4)	93 (34.8)	99 (21.4)	150 (35.3)
미취업	265 (78.6)	174 (65.2)	364 (78.6)	275 (64.7)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1 (0.3)	0 (0.0)	3 (0.6)	0 (0.0)
기혼(유배우)	183 (54.3)	186 (69.7)	194 (41.9)	296 (69.6)
이혼/별거	9 (2.7)	8 (3.0)	21 (4.5)	8 (1.9)
사별	144 (42.7)	73 (27.3)	245 (52.9)	121 (28.5)
가구주 건강상태				
보통이상	-	-	170 (36.7)	258 (60.7)
건강하지 않음	-	-	293 (63.3)	167 (39.3)

주: 가구균등화 소득으로 조정된 연간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4. 고령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가구 및 개인 자료에서 추출한 조사대상가구 및 가구주의 주요 특성과 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해당 가구의 빈곤 여부, 특히 고령자 가구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 5>는 2003~2005년의 3개년 조사 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해당 가구의 상대적 빈곤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체가구, 65세 미만 일반가구, 65세 이상 고령가구로 나누어 각각 로짓(logit) 추정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에 빠져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비빈곤가구일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를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수, 거주

지역, 취업상태, 혼인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등을 사용하였으며, 각 조사년도 사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도별 더미를 부여하였다. 참고로 가구의 금융순자산 규모의 경우 본 분석에서는 이자, 배당 등 각종 금융소득을 가구 총소득과 빈곤여부의 판별에 기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추정결과 연도더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설명변수가 빈곤 여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이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령자 가구와 일반가구를 막론하고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인 경우에 비해 빈곤가구에 포함될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고령자 가구의 경우 회귀계수의 값이 -0.9001 로 매우 큰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0.1688 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 가구의 경우 남성이 가구주라는 사실이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을 현저히 줄여주는 반면, 65세 미만 일반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라는 사실이 빈곤 위험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고령자 가구의 경우만큼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구주 연령 역시 빈곤 확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 확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 확률이 커지는 것은 노동시장의 한계선상에 존재해 있는 65세 이상 고령근로자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기회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또는 유사한 수준에 근접한 고정급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에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회귀계수의 크기가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와는 달리 취업 및 소득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된 가구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여타 가구원의 존재 여부가 빈곤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전문대재학 이상일 경우 고졸이하일 경우에 비해 빈곤에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회귀계수의 절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고학력 고령자들의 경우 현재는 물론 과거의 생애노동기간 동안 노동시장 내부에서 확보한 취업기회나 임금 소득 등에서 받는(또는 받아 온) 여타 고령자 대비 학력 프리미엄이 일반 연령대의 고학력자들이 누리는 학력프리미엄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학력 프리미엄은 현재의 취업기회나 임금 상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65세 이전에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축적해 놓은 각종 연금, 보험 등 금융자산의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 등의 차이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가구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 가구에 비해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많고 평균 임금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수도권 거주여부가 빈곤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비수도권 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취업상태는 일반적인 예상대로 가구주가 취업상태일 경우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 비해 빈곤에 있을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 가구의 경우 회귀계수의 크기가 일반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취업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빈곤 확률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일반 가구에 비해 취업 자체가 빈곤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결혼상태 더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수록 빈곤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수록 오히려 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반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 가구주 본인의 근로능력이 소실될 경우라도 배우자의 취업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가구주의 기존 소득을 대체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기혼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 능력 상실을 배우자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오히려 배우자의 존재는 가구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곤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제6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설문항목에 포함된 가구주의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가구주가 건강할수록 빈곤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건강상태와 가구주의 취업 등 경제 활동 능력이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다만 고령자 가구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반가구에 비해 회귀계수의 절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도더미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모두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구의 빈곤 확률을 낮추는 데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도의 경우 고령자 가구의 빈곤확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 성별, 가구원수, 가구주의 학력, 거주지역 등이 빈곤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가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취업상태나 결혼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변수가 빈곤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령빈곤의 결정요인 (2003~2005년) : 로짓(Logit) 추정

	종속변수 (빈곤=1)		
	전체가구	고령자가구	일반가구
상수항	0.7575*** (0.1532)	-1.2893* (0.6913)	1.4552*** (0.1830)
가구구성별(남성=1, 여성=0)	-0.3161*** (0.0747)	-0.9001*** (0.1882)	-0.1688** (0.0840)
가구의 연령	0.0165*** (0.0019)	0.0550*** (0.0092)	-0.0090*** (0.0029)
가구원수	-0.3751*** (0.0225)	-0.6144*** (0.0465)	-0.1559*** (0.0282)
가구의 학력(전문대재학 이상=1, 고졸이하=0)	-0.6492*** (0.0664)	-1.0072*** (0.1658)	-0.6621*** (0.0735)
거주지역(서울수도권=1, 비수도권=0)	-0.2550*** (0.0484)	-0.3671*** (0.0951)	-0.1978*** (0.0575)
가구의 취업상태 (취업=1, 미취업=0)	-0.9634*** (0.0556)	-0.4683*** (0.1099)	-1.0897*** (0.0667)
가구의 결혼상태 (유배우 기혼=1, 기타=0)	-0.1972*** (0.0754)	0.5635*** (0.1813)	-0.6115*** (0.0884)
가구의 건강상태 (보통이상=1, 건강하지않음=0)	-0.7392*** (0.0564)	-0.5945*** (0.0970)	-0.8482*** (0.0720)
2004년 연도 더미	0.0794 (0.0585)	-0.1057 (0.1167)	0.1540** (0.0694)
2005년 연도 더미	-0.0985* (0.0591)	-0.2647** (0.1144)	-0.0326 (0.0711)
관찰치의 수	13,860	2,473	11,387
LR Chi ²	3276.14	668.30	1233.03
Pseudo R ²	0.2261	0.1961	0.1307

주: 상대빈곤 기준.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 그리고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IV. 고령빈곤의 동태적 이행과정 분석

1. 고령자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200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고령자 가구의 빈곤 진출입에 관한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고령자 가구의 빈곤문제에서 목격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빈곤 진출입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 가구와는 달리 한번 빈곤에 빠지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고령자 가구의 ‘빈곤 고착화’ 또는 ‘항상 빈곤화’는 고령자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와는 달리 한번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좀처럼 재취업 기회를 잡기 어려워지는 등 소득창출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고령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태적 분석에서도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주 등 주된 취업자가 일시적인 실직, 전직, 질병 등으로 소득창출이 어려워질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기타 가구원이 대체소득원으로 기능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가구의 경우 이러한 소득대체가 어려워 분가한 자녀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제한적인 소득지원이나 정부, 공공단체 등의 불충분한 생계보조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건강 악화나 실직 등으로 인해 한번 빈곤상태로 진입할 경우 빈곤탈출이 극히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 <표 7>은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상대적 빈곤으로의 진출입과 관련된 동태적 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2000년 조사이후 2005년 조사에 이르는 6개 연차의 노동패널조사에 모두 참여 하였고, 매 연도별로 가구 소득과 가구주 특성이 모두 파악된 2,853가구를 대상으로 상대적 빈곤으로의 진출입 양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우선 <표 6>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2000년 조사에서부터 2005년 조사에 이르는 6년의 조사 기간 동안 각 가구가 상대빈곤 상태에 빠진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2,835가구 가운데 해당기간 중 단 한 번도 빈곤에 빠진 경험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56.5%인 1,602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단 한번이라도 빈곤상태에 빠진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43.5%에 달하였으며, 이중 6년 내내 빈곤에 빠져있는 ‘항상 빈곤’ 상태의 가구도 전체의 6.7%인 191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조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65세 이상 고령자와 그 미만인 일반 가구로 나누어 보면, 고령자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빈도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령자 가구의 경우 빈곤 경험이 없는 가구는 전체의 15.0%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일반 가구는 64.0%가 1회도 빈곤에 빠진 경험이 없었다. 반면 한번이라도 빈곤에 빠진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고령자 가구의 겨우 85.0%에 달한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36.0%에 불과했다. 특히 고령자 가구 가운데 조사대상 6개 연차 내내 항상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가구 수는 총 136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1.4%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가구의 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각 집단별 빈곤빈도의 가중 평균치를 구해 보아도 고령자 가구는 빈곤 빈도가 평균 3.57회로 일반가구의 평균 0.87회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7>은 2000~2005년의 조사기간을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연도별 상대빈곤 진입 및 탈출 비율을 구한 것이다. 빈곤 진입 비율은 전년도 조사에서 빈곤상태로 분류된 가구들 가운데 다음 연도 조사에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빈곤 탈출 비율은 전년도 조사에서 비빈곤 상태로 분류되었으나 다음 연도의 조사에서 빈곤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류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령자 가구가 빈곤에 빠질 확률이 일반가구에 비해 3~4배가량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반대로 일반가구의 절반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당해 연도에 비빈곤가구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라도 다음 연도에 빈곤에 빠질 확률이 20~30% 사이로 매우 높으며, 일단 빈곤에 빠질 경우 빈곤에 탈출할 확률은 10%대 후반으로 낮다. 반면, 65세 미만 일반가구의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10% 미만으로 고령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일단 빈곤에 빠진다 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절반 정도는 그 다음해에 빈곤에서 벗어나 비빈곤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00~2005년 기간 중 빈곤빈도

(단위: 가구, %)

빈곤 빈도	전체 가구	고령자 가구	일반 가구
0회	1,602 (56.5)	65 (15.0)	1,537 (64.0)
1회	394 (13.9)	46 (10.6)	348 (14.5)
2회	221 (7.8)	41 (9.5)	180 (7.5)
3회	170 (6.0)	36 (8.3)	134 (5.6)
4회	130 (4.6)	51 (11.8)	79 (3.3)
5회	127 (4.5)	58 (13.4)	69 (2.9)
6회(=항상빈곤)	191 (6.7)	136 (31.4)	55 (2.3)
가중평균(회)	1.29	3.57	0.87
관찰치수	2,835	433	2,402

주: 상대빈곤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매 연도별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함. 2000~2005년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매년 가구 소득이 파악된 2,835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고령자 가구는 2000년 조사 당시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임. ()는 총 가구수 대비 비율임.

<표 7> 가구의 연도별 빈곤 진출입 비율 추이: 2000~2005년 조사

(단위: %)

	빈곤진입(비빈곤→빈곤) 비율			빈곤탈출(빈곤→비빈곤) 비율		
	전체가구	고령자가구	일반가구	전체가구	고령자가구	일반가구
2000년→2001년	10.8	26.9	9.2	37.2	19.9	49.4
2001년→2002년	9.7	30.5	7.4	35.7	17.7	49.3
2002년→2003년	8.2	27.0	6.0	30.7	16.5	44.5
2003년→2004년	9.8	23.6	8.1	27.5	18.3	38.5
2004년→2005년	7.3	21.5	5.2	31.4	16.7	48.1

주: 상대빈곤 기준. 전년도 빈곤(비빈곤)에서 당해연도 비빈곤(빈곤)으로 전환된 가구의 비율임. 고령자 가구는 기준 연도(t기)가 아닌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t+1기)에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2. 고령빈곤의 동태적 이행과정에 관한 계량 분석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 등 빈곤의 동태적 이행과정에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logit) 추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곤 진입(poverty entry)의 경우 전년도 비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들 가구 중 당해 연도에 빈곤으로 전환했을 경우 종속변수는 1의 값을 가지며, 계속 비빈곤 상태를 유지할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빈곤 탈출(poverty exit)의 경우 전년도 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에 비빈곤으로 전환했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며, 계속 빈곤상태를 지속할 경우 0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빈곤 진입과 탈출의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관찰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5년 조사에 이르는 6개 연차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단일 패널데이터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8>과 <표 9>는 로짓 추정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표 8>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표 9>는 전체 가구를 고령자 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표 8>의 두 번째 칸을 보면 가구 및 가구주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대부분이 빈곤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은 줄어들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학력이 전문대 재학이상 고학력일 경우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전환할 확률은 낮아진다. 아울러 가구주가 취업상태일 경우 빈곤으로 전환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빈곤 전환확률은 높아지며, 그 외 가구의 거주지역은 빈곤으로의 전환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전년도 빈곤가구가 당해연도에 비빈곤가구로 전환, 즉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대로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와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서울수도권 거주가구 및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탈출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빈곤 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연도 더미의 경우 거의 모든 연도에서 빈곤진입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빈곤 탈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참고로 2003년의 제6차 노동패널조사에서부터 설문항목으로 추가된 가구주의 건강상태 정보의 경우 2003~2005년 조사 자료를 기초로 별도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의 빈곤진입과 빈곤탈출 확률 모두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9>는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분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가구주 특성이 빈곤진입과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 성별이 남성이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학력이 높고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진입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가구주 연령이 많고, 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 경우 빈곤진입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빈곤진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가구의 경우도 고령자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다만 가구주의 결혼상태 변수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빈곤진입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고령자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두 집단이 배우자의 취업 및 소득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자와 일반가구 모두 거주지역 변수는 빈곤진입 확률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의 경우 고령자 가구와는 달리 가구주 연령이 빈곤진입 확률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빈곤 탈출 여부로 설정할 경우 고령자 가구는 가구주가 남성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며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탈출 확률이 높아졌으며, 예상대로 가구주 연령이 많아질수록 빈곤탈출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학력과 결혼 상태는 빈곤탈출 확률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 학력, 취업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결혼상태가 빈곤탈출 확률에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탈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빈곤탈출 확률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 이외 기타 가구원에 의한 소득창출이 빈곤탈출 여부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주 소득이외 여타 가구원 소득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우리나라 가구의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로짓(logit) 추정 결과: 2000~2005년, 전체 가구 대상

	종속변수	
	빈곤 진입(yes=1)	빈곤 탈출(yes=1)
상수항	-1.5026(0.2618)***	-0.2251(0.3161)
가구주 성별(남성=1, 여성=0)	-0.4371(0.1296)***	0.3034(0.1466)**
가구주 연령(만, 세)	0.0190(0.0032)***	-0.0284(0.0038)***
가구원수(명)	-0.2326(0.0312)***	0.1688(0.0393)***
가구주 학력 (전문대 재학이상=1, 고졸이하=0)	-0.8312(0.1069)***	0.5626(0.1626)***
거주 지역 (서울수도권=1, 비수도권=0)	-0.0797(0.0694)	0.3460(0.0895)***
가구주의 취업상태 (취업=1, 미취업=0)	-0.8691(0.0828)***	0.7780(0.0949)***
가구주의 결혼상태 (유배우 기혼=1, 기타=0)	-0.2103(0.1241)*	0.1572(0.1479)
2001년 연도 더미	0.6171(0.1120)***	-
2002년 연도 더미	0.4413(0.1139)***	-0.0576(0.1333)
2003년 연도 더미	0.2216(0.1175)*	-0.1296(0.1352)
2004년 연도 더미	0.4112(0.1133)***	-0.2469(0.1383)*
2005년 연도 더미	-	-0.0446(0.1330)
관찰치수	11,138	3,037
LR Chi ²	759.50	530.63
Pseudo R ²	0.1111	0.1386

주: 상대빈곤 기준.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 그리고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9> 고령자 및 일반가구의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로짓(logit) 추정결과: 2000~2005년

	종속변수			
	빈곤진입(yes=1)		빈곤 탈출(yes=1)	
	고령자 가구	일반 가구	고령자 가구	일반 가구
상수항	-1.3663 (1.0624)	-1.0864*** (0.3142)	1.8439* (1.0633)	-1.0069** (0.4292)
가구주 성별 (남성기준)	-1.1498*** (0.3155)	-0.3097** (0.1492)	0.4846* (0.2864)	0.3018* (0.1740)
가구주 연령 (만, 세)	0.0294** (0.0145)	0.0051 (0.0046)	-0.0654*** (0.0144)	-0.0078 (0.0063)
가구원수(명)	-0.4000*** (0.0616)	-0.0815** (0.0382)	0.3689*** (0.0701)	0.0332 (0.0487)
가구주 학력 (전문대이상 기준)	-1.0755*** (0.2435)	-0.8329*** (0.1207)	0.5294 (0.3269)	0.5774*** (0.1877)
거주 지역 (서울수도권 기준)	-0.2031 (0.1369)	-0.0323 (0.0815)	0.6104*** (0.1468)	0.1974* (0.1143)
가구주의 취업상태 (취업자 기준)	-0.4225*** (0.1509)	-1.0273*** (0.0982)	0.4894*** (0.1597)	0.9424*** (0.1223)
가구주의 결혼상태 (유배우기혼자기준)	0.9426*** (0.2999)	-0.6880*** (0.1443)	-0.1595 (0.2792)	0.3666** (0.1773)
'01~'05년 연도더미	<생략>			
관찰치수	1,359	9,779	1,554	1,483
LR Chi ²	122.66	412.34	130.10	156.52
Pseudo R ²	0.0819	0.0821	0.0884	0.0763

주: 상대빈곤 기준.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 그리고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V. 결론 및 대응 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3차(2000년)~제8차(2005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빈곤규모와 그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정부 책정 연도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 고령자 가구의 최저 38.2%(2005년 조사)에서 최고 56.8%(2000년 조사)에 달할 정

도로 고령자 가구의 절대빈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미만인 일반 가구의 절대빈곤율이 10.6%(2005년 조사)에서 19.1%(2000년 조사)로 나타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의 중간 값(median income)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으로 규정하는 상대빈곤 측면에서도 고령자 가구의 빈곤실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 중 상대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최근 6개년도 평균 약 50% 정도로 전체 조사대상 고령자 가구의 절반이 빈곤상태인 반면 65세 미만 일반가구의 경우 빈곤율은 약 1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조사대상 가구 가운데 빈곤으로 분류된 가구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절대빈곤의 경우 2000년 조사 당시 고령자 가구의 점유율은 33.2%에 그쳤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45.6%로 크게 높아졌으며, 상대빈곤의 경우에도 고령자 가구의 동 점유율이 36.2%에서 44.9%로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질적, 양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의 핵심에 고령빈곤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빈곤 가구는 통계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저학력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비수도권 거주 여성 독신가구주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특징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가구주 특성이 상대빈곤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짓(logit) 추정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연령, 가구원수, 학력, 거주지역, 취업상태, 결혼 및 건강상태 등의 변수들은 고령자 가구와 일반 가구의 빈곤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령자의 경우 가구주 성별, 연령, 가구원수, 학력, 거주지역 등이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취업상태나 건강상태는 영향력의 크기가 일반 가구에 비해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고령자 가구는 조사 기간 중 상대빈곤에 머문 횟수가 일반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진출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반가구와는 달리 빈곤에 빠져들 확률도 높지만, 한번 빈곤에 빠지면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고착화’ 또는 ‘항상 빈곤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 가구의 빈곤 진입과 탈출 등 동태적 이행과정에 가구 및 가구주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상대빈곤 상태로의 진입과 탈출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주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추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주가 남성이며 학력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적을수록 빈곤진입 확률이 낮아지며, 가구주의 취업상태도 빈곤진입 여부에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탈출 여부와 가구주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가구주가 남성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며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탈출 확률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과 결혼상태는 빈곤탈출 확률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 노동시장의 유연화, 산업기술의 진보, 그리고 핵가족화에 따른 고령자 부양 형태의 변화 등으로 향후 고령자 가구의 빈곤문제가 향후 더욱 심화될 개연성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및 일자리의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당국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등 고령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점은 고령빈곤의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노후생계 대비 노력이나 기존의 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빈곤 확산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능력 및 자산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 노력과는 별개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단체 등이 고령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의 고령빈곤 대책은 이들 취약집단 가운데 우선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고령빈곤 위험도가 높은 파악된 각 취약집단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능력 개선 및 취업적용 프로그램을 발굴,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60대 후반, 70대에 이르기까지 경력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장지연(2003)). 물론 공공부문의 취업능력 개발 투자의 대상으로서 고령자 집단이 갖는 우선순위가 청장년 집단에 비해 어느 정도 앞서는지, 그리고 투자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통한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및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고용보조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을 통한 고령근로자 고용촉진 노력도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고령자 가구의 자활 및 빈곤탈출 지원 노력과 더불어 취약 고령자 가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건강 악화나 연령 문제 등으로 더 이상 근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고령자 가구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유일한 대책일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국민연금 조기수령제 보완, 경로연금증액, 각종 노인복지수당 신설 등 최근 수년간 고령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혜대상의 선정이나 지원 금액 측면에서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령자 생계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획기적인 증액과 더불어 복지전달 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이외에 고령자 가계의 생계비용(living cost)을 절감시킬 수 있는 고령자용 생필품 구매쿠폰 지급이나 공공요금 할인혜택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당면한 고령자 가구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빈곤 여부 판단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상에 나타난 각 가구의 연간 총소득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산의 규모 및 소비규모를 빈곤여부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할 경우 분석의 정도(精度)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 빈곤 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빈곤선(poverty line)의 정의나 가구균등화지수 설정 방식과 관련해 본 연구와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사용한 빈곤 여부 및 빈곤진출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가구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수, 거주지역, 취업상태, 결혼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등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구의 종사상 지위, 종사산업, 생애취업기간, 순금융자산 등과 같은 다양한 설명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각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령빈곤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04),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분석』, 제10권 제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제8권 2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김교성·최영(2006), 「빈곤근로층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환·전용석·최마울(2004),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철희(2003),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일(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성지미·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2호, 대한가정학회.
- 안중범·전승훈(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제15권, 한국경제연구학회.
- 안중범·전승훈(2006), 「노후대비와 가계저축행위」,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OECD(2001), "Money Too Tight to Mention: Poverty Dynamics in OECD Countries", in Employment Outlook 2001.